제6회 규제합리화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 회의록

2026. 7. 16

국 무 조 정 실
규 제 조 정 실

Ⅰ. 회의개요

○ 일　　시 : ’26. 7. 16. (목) 14:00

○ 출석위원(10명)

○ 민간위원(8명)

- 최상한, 고동수, 고은아, 김기명, 우윤석, 이민창, 정상훈, 정은미

○ 정부위원(2명)

- 국조실, 법제처(윤재웅 사회문화법제국장)

Ⅱ. 상정안건

연번	의안번호	상정기관	의 안 명	구분
①	2026-189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②	2026-207	농식품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Ⅲ. 회의 결과

1. (심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문체부)

□ 개 요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 사무명	① 숙박요금표 게시 및 게시한 숙박요금 준수 의무 신설 ②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위원회 결정 내용	① 요금표 게시, 게시의무 미준수 시 행정처분 **원안동의** ② 현장에서 규제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요금표 게시방법, 행정처분 면책기준 등에 대한 해설서, 사례집 등을 만들고, 향후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 지자체에 권한위임 검토할것 **부대권고**

□ 논의 내용

(1)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해당없음

(2) 부처 의견 청취

○ (문체부)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숙박요금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가격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관광객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최근 외래관광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광환경을 개선하고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숙박요금 공개제도는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임.

○ (OOO 위원)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에 면책기준과 세부 집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체부) 숙박요금 게시와 준수의무는 도시민박업뿐만 아니라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생활숙박시설, 농어촌민박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동일한 집행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임.

○ (OOO 위원) 숙박요금을 언제 게시해야 하는지, 게시가격을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등 핵심적인 집행기준이 보이지 않음. 세부기준 없이 의무만 규정하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움.

○ (OOO 위원) 사업자가 수요에 따라 가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면 게시가격을 실제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게시가격과 실제 결제가격이 다른 경우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단속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 (문체부) 홈페이지나 온라인 예약플랫폼 등을 통해 게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신고와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활용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 (OOO 위원) 규제대상이 수만 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실제 단속 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함. 문체부가 직접 관리하기보다 결국 지자체가 집행하게 될 텐데 현실적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의문임.

○ (문체부) 다른 숙박업과 마찬가지로 현장 집행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체계임. 요금 게시와 준수 여부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본 방향임.

○ (OOO 위원) 숙박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시장 자율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특히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영역인 만큼 정부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함.
일부 사례를 이유로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문체부) 이번 제도는 가격 수준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승인하는 제도가 아님. 사업자가 스스로 정한 가격을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게시한 가격대로 거래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임. 시장가격 형성에는 개입하지 않는 제도임.

○ (OOO 위원)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대부분 영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계절이나 행사에 따라 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가격게시 의무와 행정처분까지 부과하면 영업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체부) 가격을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변경된 가격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면 됨. 가격 변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임.

○ (OOO 위원) 현장 집행은 결국 지자체가 담당하게 되는 만큼 향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위원회 논의

○ (OOO 위원) 숙박요금 공개 자체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임. 다만 게시방법이나 게시가격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자와 집행기관 모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부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OO 위원) 제도의 필요성과 별개로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제도가 되어야 함. 게시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지자체의 관리체계를 함께 마련하지 않으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부대권고를 통해 집행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OOO 위원) 향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심의 결과 : 원안동의 / 부대권고**

① 요금표 게시, 게시의무 미준수 시 행정처분 **원안동의**

② 현장에서 규제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요금표 게시방법, 행정처분 면책기준 등에 대한 해설서, 사례집 등을 만들고, 향후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 지자체에 권한위임 검토할것 **부대권고**

<안건2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은 계속심사로 제8회 본심사 회의록에 일괄 게시>